

중국 외교담론의 한국적 재구성:

‘중국의 북한포기론’과 ‘북한붕괴론’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지영**

| 목 차 |

I. 서론	괴론’ 담론 비교
II. 중국의 외교정책과 담론 연구방 법론	V. 중국 대북 외교담론의 재구성: ‘중국의 북한포기론’의 한국적 재구성
III. 중국 대북 외교담론의 구성: ‘중 국의 북한포기론’의 중국적 구성	VI. 결론
IV. ‘중국의 북한포기론’ vs ‘북한붕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시진핑 시대 중국 비정부행위자의 대북 담론 구성과 한국적 재구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2013년에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내에서 제기된 ‘중국의 북한포기론’과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한국에서 제기된 ‘북한붕괴론’의 비교를 통해 국가의 정치, 외교적 맥락에 따른 두 담론의 구성 및 재구성 과정과 유사성 및 차별성을 밝히고자 한다. 두 개 담론의 비교를 통해 중국의 북한포기론에 담겨 있는 다변화된 중국의 대북 정체성과 중국의 국가이익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중국의 북한포기론이 내/외부의 행위자들에 의해 최초로 구성되고, 한국의 주요 미디어와 영향력 있는 학자들을 포함한 외부행위자와 내부행위자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중국의 비국가행위자들의 대북담론이 한국의 정치외교적 맥락에 따라 재구성되며 한국의 대북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3A2046903).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전임연구원.

보여준다. 탈냉전 시기 중국의 대북 정체성의 다양화와 대북 외교정책 담론의 의미 전환 과정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주제어: 중국, 북한, 담론, 중국의 북한포기론, 북한붕괴론

I. 서론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발표된 중국 정부의 공식성명은 1, 2차 북핵실험 후 성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차 북핵실험(2006. 10. 09) 후의 성명과 비교하면 단지 몇 가지 부사구만 바뀌었다.¹⁾ 중국 정부는 3차 실험 후의 외교성명에 ‘갑자기’와 ‘다시 한번’ 같은 표현을 삽입했고, 1, 2차에 사용했던 문장을 삭제했다: “중국은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통일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인 이기현 박사는 3차 핵실험 이후의 외교성명에 ‘평화적’이라는 문구의 삭제를 외교적 해결방법의 다양성에 대한 가능성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²⁾ 하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 외교성명만으로는 대북 정책에 있어 과거와의 차별성이나 대북 정체성의 변화를 읽기는 어려웠다.

중국 공식 외교성명의 미세한 변화와 달리 중국의 비정부행위자들은 대북정책에 대한 논쟁을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중국 인터넷신문의 사설, 학자, 정책전문가들의 대북담론에 나타난 이분법적 대북 정체성과 강경한 대북정책의 요구가 반영되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다음날 『환구시보』의

1) 3차 핵실험 후 중국의 공식발언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에도 무릅쓰고 갑자기 핵실험을 진행했으며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핵확산을 방지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자는 것은 중국의 일관된 입장으로 우리는 북한에 비핵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다시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며 6자회담의 궤도로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한다”,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각 관련 당사국들의 공통된 이익에 맞고, 중국 정부는 관련국이 냉정한 반응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은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뉴시스』 2013/02/13).

2) 이기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http://www.kinu.or.kr/2013/0222/co13-06.pdf>. (2015년 11월 12일 검색)

사설은 ‘북한이 이번(3차) 핵실험을 통해 안보 불안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생각은 천진한 것이며,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Global Times* 2013/02/12). 2월 17일 사설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경제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다음날 신문의 사설에서는 북한에 대해 반대하는 용기를 가져야 하며, 북한의 행위들은 중국의 국익에 대치된다고 주장했다(*Global Times* 2013/02/17). 또한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반드시 응징해야 하며(懲罰是必要的, chengfa shi biyao de), 중국은 맹목적으로 (북한을) 비호(一味庇護, yiwei bihu)하고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관영미디어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포용정책의 폐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과거 중국의 미디어 성향과 비교했을 때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중국의 인터넷 매체와 함께 몇몇 학자들도 북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였다. 셴뎡리(Shen Dingli)와 장롄꾸이(Zhang Liangui)는 미국 및 국제사회와 북한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셴뎡리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다른 방법이 없기(无奈接受, wunai jieshou) 때문에 북한이 핵보유 국가가 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³⁾ 스인홍(Shi Yinhong)은 북한의 행동을 중국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며, 북한은 오직 자국의 이해만 고려할 뿐 중국의 국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⁴⁾ 따라서 북한이 결국엔 핵(보유)의 길(核道路, he daolu)로 나아갈 것이라 지적하였다.

반대로 중국 정부의 급진적인 대북정책 전환은 국가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담긴 주장도 있었다. 2월 16일 다른 신문사설에서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 가설(不切實際的假設, buqieshiji de jiashe)이며, 중국은 다른 강대국들과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중재자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이 동아시아지역에서 다른 강대국들과 새로운 균형을 추구할지라도, 한미일의 새로운 동맹관계에 비교하여 중국이 북한과의 전통적 관계를 퇴보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에 중국이 대북 포용정책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 중국이

3) 셴뎡리는 중국의 저명한 미국학 연구자이며, 한반도 이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경한 대북정책과 미중 간의 협력적인 대북정책을 주장해 왔다(*Caijing* 2013/02/18)

4) TV 토론에서 스인홍이 주장한 내용이다(*Yihu yixitan Phoenix TV* 2013/02/23).

북한의 제1의 적(頭号敵人, touhao diren)이 될 수 있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전시켜 온 북한과의 양국관계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중국의 장성인 평관치엔(Peng Guanjian)은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비책임성과 독자적 해결능력의 어려움을 강조한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는 중국의 문제만이 아닌 국제사회와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둘째, 중국은 북한 핵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아니다. 셋째, 중국은 혼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세 가지 논점은 국제사회에서 제기하는 중국책임론에 대한 방어적 논리를 가진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혼자 책임질 것이 아니라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해야 하며, 북한 핵문제를 일으킨 당사국이 아님으로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는 함의를 지닌다.

중국 내 인터넷 매체와 학자들 간에 촉발된 중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논쟁은 덩위윈(Deng Yuwen)의 기고문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보름 후 덩위윈은 영국의 세계적인 경제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에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China Should Abandon North Korea)’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기고를 한다.⁵⁾ 덩위윈의 소속기관인 중앙당교⁶⁾의 정치적 상징성과 『파이낸셜 타임즈』의 국제적 영향력은 그의 ‘중국의 북한포기론’을 국제적으로 확산시켰다. 덩이 주장한 ‘중국의 북한포기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실험, 악화된 경제상황, 김정일의 사망 등의 이유로 중국이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둘째,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 북한 정권을 포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전에도 국제사회에서 2000년대 들어 중국의 북한 포기를 주장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다.⁷⁾

5) 덩위윈 (2013), “China should abandon North Korea,” <https://next.ft.com/content/9e2f68b2-7c5c-11e2-99f0-00144feabdc0>. (2016년 1월 20일 검색)

6) 중국 공산당원들의 사상교육 담당기관.

7) 2003년 6월 4일 *Washington post*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뿐만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서진영 2006, 365). 같은 해 8월에는 중국 정부가 북한을 위기로 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북한포기론’은 *New York Times*, *Foreign policy* 등의 미국 미디어에 2002년, 2009년, 2013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중국학자들의 인터뷰와 함께 실렸다.

하지만 덩위원의 ‘중국의 북한포기론’과 그의 주장을 둘러싼 논쟁 및 영향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비정부행위자의 대북담론이 국제적 신인도가 있는 서방미디어를 통해 소개된 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다. 특히 북한의 최대 지원국인 중국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한 담론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둘째, 덩의 주장은 시진핑 정부의 중국 대북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는 기사나 학술자료에 중요한 이슈로 제시되었다. 셋째, 덩의 주장이 국제적으로 확산된 시기의 정치적 민감성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정부가 유엔의 강력한 대북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실제로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자체적인 경제 제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중국 정부의 상대적으로 강력한 외교조치와 경제조치와 맞물려 덩위원이 비정부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다시 정리하면, 중국 비정부행위자의 대북담론의 국제적 확산,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분석의 주요한 이슈화, 확산 시기의 정치적 민감성은 덩위원의 ‘중국의 북한포기론’을 주목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학자들에 의해 구성된 대북담론이 한국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발표된 덩위원의 기고문에 나타난 ‘중국의 북한포기론’ 담론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한국적으로 재구성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이 중국 정부의 외교담론을 주요하게 분석했다면, 본 연구는 한국의 정치적 맥락에 따른 중국 비정부행위자담론 의미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⁸⁾ 중국 학자들의 대북담론을 일차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에서 재구성된 중국학자의 담론을 이차적으로 다루어 어떻게 중국학자의 담론이 한국에서 재구성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중국의 북한포기론’이 절정에 이르렀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디어에 등장한 중국의 대북담론과 1990년 중반 이후 지속되어 온 ‘북한붕괴론’의 논리적 유사성과 상이성을 비교 분석할 것

8) 선행 연구들이 중국의 정부문건이나 정책결정자들의 발언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사적 행위자의 발언의 영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물론 덩위원의 소속이 중국 공산당 당교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의 부편집장이었기에 중국 정부를 대변한 것처럼 비취질 수 있다. 하지만 그의 기고는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이 아닌 개인 학자로서의 성격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의 담론을 비정부행위자의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중국 비국가행위자의 외교적 담론이 중국의 대외정책에 끼친 영향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그 국가의 정치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중국의 대외정책 연구를 위해 사용하는 ‘담론’의 이론적 개념과 적용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중국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외교정책과 대외 정체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 담론 분석방법론이 가지는 한계를 설명한다. 특히 중국 권위주의 정치시스템으로 인한 적용의 한계에 주목한다. 담론 분석방법론을 적용한 중국 외교정책 및 대외 정체성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둘째, 덩위원의 기고문에 담긴 ‘중국의 북한포기론’의 담론의 논리구조와 정치적 맥락을 반대 담론과의 ‘병렬(Juxtaposition)’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특히 탈냉전 시기 변화된 중국 정체성,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해석, 북한의 대중국 정체성의 본질에 대해 설명한다. 셋째, ‘중국의 북한포기론’과 ‘북한붕괴론’과 비교 분석할 것이다. 두 담론의 구성주체의 상이성, 북한 정권의 붕괴주체, 두 담론의 순환적 상호 강화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할 것이다. 넷째, 덩위원의 담론이 한국의 정치적 맥락에 따라 재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중국의 북한포기론’과 ‘북한붕괴론’의 상호 강화를 통해 순환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향후 연구를 위해 이 연구의 이론 및 실증적 한계를 밝힌다.

II. 중국의 외교정책과 담론 연구방법론

1. 외교정책과 담론 연구방법론

담론은 행위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요소로 정의되기도 하고, 정체성 변화를 반영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담론의 개념은 다양한 주제와 연관성을 가지며, 각각의 담론 개념은 대조적인 존재론과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는 이론적 기반을 가진다. 외교정책 연구를 위한

담론 분석방법론은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실증주의자들은 담론을 특정 목적을 공유하는 이해 및 관점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이해한다(Snow & Benford 1988). 담론은 정치지도자나 정책 결정자의 인식, 생각, 믿음을 반영하기도 하고, 새로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정부의 정책결정자의 의지나 생각이 어떻게 국가의 행위에 반영되는지 고찰하기 위해 개인의 ‘이미지’나 ‘인식프레임’ 연구를 진행한다.⁹⁾ 실증주의자들은 담론이 집단적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동기화한다고 주장한다(McAdam et al. 1996, 6). 실증주의자들이나 경험주의자들에게 담론은 ‘인식전략의 노력’들을 의미하는 프레임이나 인식적 도식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인식전략의 노력’은 세상과 자신들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다.

탈실증주의자들은 담론 연구를 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 국제사회의 정치적 세계가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하며 전체적인 사회구조와 담론을 연관시켜 해석한다. 언어의 독자적인 존재론을 강조하고, 사회는 내재하는 성질과 본원적인 인과적 역학관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데리다(Derrida 1978)는 모든 인간과 사회의 경험은 구분의 논리에 따라 문자 혹은 글쓰기 방식에 따른 담론의 개념으로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푸코는 담론 실천과 비언어적 행위 결합체의 연결을 보여주려 한다(Foucault 1972).¹⁰⁾ 미국의 외교정책 사례에 후기 구조주의적 담론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캠벨(Campbell 1992)은 데리다(Derrid 1978)의 해체(deconstruction) 개념을 발전적으로 적용하였다.¹¹⁾ 그는 미국의 정체성이

9) 실증주의자들은 이미지나 인식프레임 연구를 위해 레토릭이나 텍스트 연구의 양적통계방법을 주로 사용한다(McAdam 1996).

10)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담론은 상징적 체제, 사회질서들을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며, 담론 분석은 그들의 역사적 정치적 구성과 기능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탈실증주의 담론분석과 함께 밀리켄(Milliken 1999)은 네 가지 국제관계의 담론 분석의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해체(deconstruction), 병렬(juxtaposition), 정복된 지식(subjugated knowledge), 계보학적 방법(genealogical method).

11)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외교정책이 정체성의 표현이라 전제한다. 이 전제는 정체성 개념의 담론적, 정치적, 관계적, 그리고 사회적인 성격과 연관되어 있다. 정체성이 담론적이며 정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기 때문이다. 담론의 표현들은 특별한 해석의 시각 안에서 외교정책 이슈들의 순서를 매기는 일이며, 그에 따른 외교정책은 적합한 반응을 형성하는 결과를 도출한다. 정체성을 담론에 의해 구성된 정체성과 그것에 의지하는 정책으로 이론화하는 것은 여분의 담

구성되는 과정을 담론분석을 통해 밝혀내고, 구성된 정체성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담론 분석방법들은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실제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복합적으로 이용된다. 담론 형태의 실천을 분석하기 위해서 담론분석가들은 언어와 비언어적 요소들을 다양하게 다룬다. 예를 들어 연설, 보고서, 정치리플렛, 역사적인 사건들, 인터뷰, 정책 그리고 생각들이 담론분석가들의 분석재료가 된다. 두 가지 담론 분석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연구가는 비비엔 슈미트(Vivien Schmidt)이다. 슈미트(2001)의 연구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복지정책 추진과정에 있어 담론의 역할과 국가별 특성을 연구한 슈미트의 담론주의적 구성주의를 발전적으로 적용한다. 그는 세 국가의 이해관계나 정치경제적 맥락에 따라 국가별 복지 담론이 다양하게 구성되고, 각 국가의 정책실현을 위한 담론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슈미트의 연구는 담론이 각 국가의 정치경제적 맥락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¹²⁾

본 연구는 당위원에 의해 구성된 ‘중국의 북한포기론’ 담론이 한국의 정치, 외교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재구성되고 해석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탈실증주의자들의 담론분석 방법인 ‘병렬(Juxtaposition)’을 통해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생산된 ‘북한붕괴론’과 ‘중국의 북한포기론’의 차별성을 살펴보고, 두 담론의 순환적 담론의 재생산 구조를 살펴본다.

론영역에서의 객관적인 정체성들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체성은 행위와 비담론적 요소들이 측정되는 것에 반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없다.

12) 슈미트(2002, 210)는 생각의 측면에서 담론이 정책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논리를 개발하는 인식적 역할과 국가의 가치기준에 준하는 정책프로그램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규범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정책 담론은 규범과 핵심개념을 정의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하고, 준수해야 할 방법들을 설명하고, 사용하는 정책적 도구를 개발하고, 주어진 정책영역에서 국가정책의 논점을 설정함으로써 행동을 유도한다(March & Olsen 1995, 45-46).

2. 중국 외교담론에 관한 선행 연구

중국 정부행위자의 거시적인 대외정책 원칙의 정치적 담론 분석은 중국 정책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력 증강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비약적으로 성장한 중국은 정책결정 과정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중국의 외교정책은 과거처럼 몇몇의 지도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집단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학자들의 자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다양한 비정부행위자들의 성장은 최고지도자와 공산당이 주도하던 단일한 국가정체성이 다변화와 다양화된 복합적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정부의 미디어 통제는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엔 내부분건이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인터뷰를 근거로 미국이나 한국 미디어에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최근의 논쟁은 공개된 형태로 중국 TV나 신문 지면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북한 관계의 부정적 측면, 중국 대북정책의 새로운 전환, 북한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비판적 평가들이 여과 없이 대중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중국의 국가정체성과 외교정책 변화 연구를 위해서는 비정부 영역의 미시적 담론 분석이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되는 중국 정부의 미디어 통제로 인해 미시적 담론 연구방법을 적용하기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¹³⁾ 중국 정부는 공산당 일당독재에 의해 운영되고, 정치 담론의 유통이 중국 공산당과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 정부의 대외정책이나 변화를 새로운 인터넷 매체가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인 것처럼 반영하기도 한다. 서방의 민주주의시스템과 달리 중국의 권위주의체제하에서는 담론의 완전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 미디어들의 보도규칙과 중국 공산당 선전의 언어체계를 모르면 중국이 통제하는 공식미디어를 통해 효과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13) 중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논쟁은 진행 중이다. 정치체제의 관점에서 중국을 권위주의,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및 전체주의로 분류한다(조영남 2009, 55).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정치체제를 강력한 권위주의로 정의하고자 한다. 강력한 권위주의의 특징은 국가가 미디어를 통제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중국 비정부행위자들의 북한에 대한 다양한 담론의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관영 미디어들은 비교적 대담하게 고급 정치 정보를 내보내고 있다.¹⁴⁾ 또한 중국 공산당 계파 간의 정치투쟁도 미디어를 통해 부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¹⁵⁾ 이러한 변화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 대외정책과 정치의 다양한 담론의 형성으로 인해 담론 분석방법은 중국의 정책이나 정치 연구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의 정체성 변화와 미디어의 정부통제의 변화로 인해 나타난 외교담론에 대한 연구양은 적지만 질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중국학자들이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미국의 예외주의를 비교하면서 2005년 이후 공식화된 중국 정부의 담론인 ‘평화적 발전(peaceful development)’과 ‘조화로운 사회(harmonious world)’, 그리고 비공식적 담론인 ‘천하(Tianxia)’ 담론을 외교적 실천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는 중국이 공식화한 외교노선과 정체성 변화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데 유용한 연구이다. 하지만 중국 외교담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중국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한계를 가진다.

지아다이와 현기덕(Dai & Hyun 2010)은 3개국의 대표적인 미디어에 나타난 북핵실험에 대한 언어프레임을 연구하였다: 미국(*Associated press*), 중국(『신화통신』), 한국(『연합뉴스』). 주요 분석방법으로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을 사용하여 북핵실험에 관한 각국 미디어 프레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세 국가의 미디어 프레임은 공통점과 차별성을 가진다. 세 개의 미디어는 핵실험에 대한 결의안, 국제공조의 필요성,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으나, 각각의 미디어는 국가의 정치상황이나 문화에 따른 차별성도 가진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테러와의 전쟁’, 중국은 ‘이슈를 다루기 위한 협상법칙’, 한국은 ‘내재된 냉전의 인식’이

14) 웨이신(微信, 중국 모바일 메신저) 공식 계정들 중 신정보(新京報)의 ‘정쓰얼(正事兒)’ 역시 그중 하나이다.

15) 2015년 7월 7일과 7월 27일, 시진핑 당국이 금융시장 회복에 힘쓰고 있을 때 류원산이 주관하는 신화통신사는 해당 클라이언트와 트위터 계정에 “금융시장 회복은 효과가 없다”, “붕괴는 재현된다”라는 내용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가 시진핑 당국에 대한 저항이며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해석한다(『대기원시보』 2015/10/15).

각각 강조되었다. 이 연구의 핵심주장은, 국가는 세계화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행위자이지만 국내외의 복잡한 문화와 정치에 의해 재해석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각 국가의 정치적 맥락에 따른 미디어 프레임의 재구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미디어(『신화통신』)가 북핵 이슈에 대해서 ‘협상원칙’을 가장 중시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언어의 양적 분석 연구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현상만을 보여줄 뿐 중국의 비정부행위자인 신화통신이 ‘협상원칙’을 중시하는 정치적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III. 중국 대북 외교담론의 구성: ‘중국의 북한포기론’의 중국적 구성

덩위원(Deng Yuwen)은 중국이 북한을 포기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그의 논리구조는 중국의 변화된 국가정체성, 북한의 군사전략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에 따른 중국의 국가이익, 북한의 대중국 정체성에 대한 재해석이 담겨 있다. 첫째, 이념적인 이유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가설이다. 이념은 중국 외교정책의 기본이 아니며, 만약 이념이 외교의 근간이라면 서방과의 관계를 중단해야 하며 중국과 북한 간의 이념적 차이가 중국과 서방과의 이념적 차이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이념적 정체성의 변화와 북한의 정체성의 지속을 강조한다. 과거 모택동 시대의 사회주의 시절의 중국과 현재 시진핑 시대의 사회주의 중국은 차이가 있으며, 변화된 중국의 정체성은 북한보다 서양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중국과 서방과의 변화된 관계에 대한 덩의 평가에 대해 렌웨이동(Ren Weidong)¹⁶⁾은 중국과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근본이익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촉발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전통주의자들은 한반도에서 중국과 미국이 추구하는 국가이익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중국은 오래된 동맹국과의 관계

16) 중국의 현대국제관계학 연구소의 연구원.

를 우선해야 한다고 믿는다. 런웨이동은 미국이 북한문제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의 문제로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과의 변화된 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덩은 현대전의 초국가적 속성으로 인해 북한의 군사전략적 가치가 약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냉전시대의 유용한 전략적 완충지대였던 북한은 현대 전쟁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 전략적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북한은 그 자체가 위협의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반드시 다른 국가(북한)를 대신해서 미국과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덩은 김정은 정권이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경제개혁개방을 할 수 없기에, 중국이 북한과 특별한 관계를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린다. 북한의 내재적 정체성과 완충지대로써의 지정학적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재평가한다. 북한 정권의 '고정불변', '부정적 자산', '위험'의 표현을 통해 북한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중국의 대북 외교정책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런(Ren)은 미국과의 힘의 균형추로써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면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것은 잘못된 전제이다. 그는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장거리 미사일이 한국을 공격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미국에 대한 억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지는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그는 북한은 중국에게 미국의 전략적 보호막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덩(Deng)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지는 호의적인 감정을 북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호의적인 감정은 순망치한(唇亡齒寒, chunwang chihan)의 역사적 친밀성에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자신의 동맹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꿀 수 있으며, 그럴 때 중국은 북한 핵무기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덩은 북한이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미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으면,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은 결과적으로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로 위협하는 적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의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덩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중국 정

부는 북한을 포기하는 방향의 대북외교정책을 추진하거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친중국 정권을 세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중국의 ‘내정불간섭(不干涉政策, bu ganshe zhengce)’ 외교원칙을 ‘제한적 간섭(有限干涉, youxian ganshe)’으로 바꾸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덩의 주장은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학자와 자유주의 학파로 대변되는 전략중심론자들은 중국 자신의 정책을 재평가하고 미국과 협력하여 좀 더 강력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핵실험과 직후 20명의 중국 국제정치학 전문가들은 2009년 5월 26일자 『환구시보』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제재에 대한 지지를 표현했다. 이 강력한 중국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중국에서 정책 전문가들(circle) 사이에서 ‘전략주의자’들로 불린다. 이들은 중국이 미국과 협력을 통해 중국의 국익을 위한 전략지도를 그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전문가 그룹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공유하며, 북한과 중국관계에 대해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둔다. 이 그룹은 중미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주도된다. 청화대의 쑨저(Sun Zhe), 복단대의 렌씨아오(Ren Xiao), 중앙당교의 장롄꾸이(Zhang Liangui)도 이 그룹에 포함된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 정부가 미국과 협력적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중국이 미국의 위협에 자주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중국의 국익을 약화시키는 북한과의 고립된 일들을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전략주의자’들의 관점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일부는 몇 년 전부터 북한에 좀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북한을 지지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2009년 북한의 2번째 핵실험 이후 중국학자와 전문가 집단 내에서 새로운 대북전략에 관한 대규모 논쟁이 진행되었다. 북한이 6자회담의 참여를 중단하자 ‘전략주의자’들의 주장이 중국의 미디어를 지배했으며, 5월 25일 2차 핵실험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대화외교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전략주의자들의 논의는 더욱 증폭되었다. 더 나아가 많은 중국인들은 6자회담의 기본적 전제인 북한의 핵보유가 협상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은 자유주의자들 담론의 정당성을 강화시켰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풍계리는 중국 접경지역에서 매우 가까운 지역이었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은 북핵실험이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중국의 지역안보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을 포함한 공격적인 군사력 강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북핵실험은 중국의 지역안보에 도전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자유주의자들은 중국이 국가이익의 관점을 새롭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9년 4월 주요 미디어와 외교정책 분석가들은 중국의 장기적인 대북정책의 기본노선에 도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특히 2차 북핵위기 이후 중국 정부의 6자회담 추진 결정에 대한 광범위한 정책 담론 경쟁이 촉발되기도 하였다.

렌웨이동과 덩위원의 담론 경쟁은 북한 정체성에 대한 중국 내 학파들의 상반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덩이 한반도 안보문제의 핵심원인을 북한 정권의 내재적 요인에 두었다면, 렌은 북한의 대외 조건인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두고 있다. 둘째, 덩은 북한을 부정적인 담론으로 묘사했다면, 렌은 북한을 중국의 국익에 여전히 부합하는 긍정적인 담론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자산’과 ‘전략적 균형추’가 부정과 긍정의 묘사로 대비된다. 또한 렌은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동맹의 지속성을 상징하는 주한미군을 예시로 제시하며, 북한의 전략적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IV. ‘중국의 북한포기론’ vs ‘북한붕괴론’ 담론 비교

2013년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북한포기론’은 덩위원(Deng Yuwen)의 기고문을 통해 영향력 있는 국제적 담론이 되었다. 그의 기고문은 구글에서 12,800개 이상의 검색물에서 인용되었으며, 중국의 대북정책 관련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학술지에 언급되었고, 한국의 미디어도 대대적으로 인용하였다. 영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아담 캐스카트(Adam Cathcart)

는 당위원의 글을 자기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였다. 중국의 고위급 지도자와 많은 대화를 했던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또한 중국정부도 북한의 위협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그도 ‘중국의 북한포기론’에 흥미롭게 인식하고 있다(Fareed 2013). 테일러 브랜든에 따르면 브루킹스 연구소의 아시아 담당자 조나단 폴락(Jonathan Pollack)은 ‘중국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북한이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¹⁷⁾이라는 생각이 터무니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Taylor 2013).

하지만 ‘중국의 북한포기론’은 1990년대 ‘북한붕괴론’의 진화된 담론 형태처럼 보인다. 당의 담론이 강조하는 ‘북한의 내재적 문제, 고정불변성, 안보위협’ 등은 과거 ‘북한붕괴론’ 담론의 핵심논리와 유사성을 가진다. 1990년대 북한의 자연재해와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많은 학자들이 북한이 단기간에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포스터 카터(Foster-Carter 1994, 32), 마커스 놀란드(Marcus Noland 2002, 14-15), 에버스테드(Eberstadt 1995, 39)는 경제적 어려움과 김정일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북한 붕괴를 주장했다. 몇몇의 서방학자들은 북한 정권의 붕괴 후 한국 중심의 통일을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Maxwell 1996; Green 1997; Oberdorfer 1997).

북한붕괴론을 주장했던 많은 연구들은 북한을 지도자의 리더십을 심리학적 관점으로 접근했다. 북한 지도자는 비이성적이며 비정상적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런 지도자가 경영하는 북한이라는 국가는 비이성적이며 비정상적인 행위자라고 주장했다. 김일성과 그의 아들인 김정일은 모두 충동적이며 이상하다(impulsive and eccentric)고 평가하기도 하고, 북한을 ‘피해망상의 생존자들의 국가(paranoid survivalist)’로 설명했다(Olsen 1986, 851). 북한의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타락하고, 불안정하고 의미 있는 협상을 하기엔 의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Han 2009).¹⁸⁾

북한 지도자들의 비정상적 심리적 특성에 관한 전제는 군사적 영토 확

17) 당위원은 그의 기고문에서 중국이 역사, 이념, 전략의 이유로 인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결국은 포기(放棄, fangqi)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은 통제 불능이며, 중국에게 ‘부정적인 자산(負資產, fu zichan)’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당의 ‘중국의 북한포기론’을 언급하며 자기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하고 있다.

18) 대북 강경론을 주장했던 많은 연구들이 북한 지도자의 비정상적 정체성을 강조했다(Eberstadt 1997; Nicksch 2005; Sokolski 2001).

장이거나 북한 침략에 대한 매우 강력한 선호를 고려하는 정책발전으로 연결되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심리적 비정상성으로 인해 북한이라는 국가는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 정권을 제거하는 것이다 (Smith 2000). 빅토르 차와 데이비드 강(Cha & Kang 2003, 303)은 이러한 북한붕괴론에 대해서 북한정권에 대한 부차적인 주장이 선호를 기반으로 한 특별한 의도와 함께 북한의 경우에 가설로 적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결국 비정상적인 북한의 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미국이나 한국의 강력하고 공격적인 대북정책과 전략을 통한 북한 정권의 붕괴가 유일한 답이라는 주장을 도출하게 만든다.

북한에 대한 행동과학주의적인 가설은 강력한 대북 강경정책 주장을 강화하는 정책적 효과를 실제로 가졌다.¹⁹⁾ 김일성의 사망과 북한의 대기근이라는 결정적인 사건과 많은 학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김영삼 정부 시기 미국의 행정부 및 학자들과 청와대와 외교부 대부분의 관료들은 북한붕괴론을 강력하게 믿었다(Kim 2013). 실제로 북한붕괴론에 대한 믿음을 가진 한국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을 초기의 포용정책에서 강경정책으로 급선회한다. 실제로 ‘북한붕괴론’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북한붕괴론’은 2000년대 후반 북한 김정일과 장성택의 사망 후 다시 등장하였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였다. 김정일의 건강악화설이 제기되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붕괴론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2월 친영우 외교부 2차관은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와의 조찬 자리에서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붕괴하고 있고,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면 2-3년 내에 정치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장담했다(『한겨레 21』 2016/02/22). 이명박 대통령도 2011년 “통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선언했다. 김정일의 경험부족과 경제상황의 악화 등이 북한붕괴론의 근거였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북한 경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했고, 5·24 조처 이듬해인 2011년 북-중 무역이 전년 대비 162%로 급증하기 시작하여, 남북경협의 공백을 북중경협이 채우기 시작했다(『한겨레 21』

19) 전쟁 예방이나 세력전이 개념을 중시하는 미국의 현실주의 이론가들이 상대적 힘의 물리적 조건을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분석의 실질적 대상은 행동과학주의의 개념인 심리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2016/02/22).

2013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고모부인 ‘2인자’ 장성택의 처형되자 북한붕괴론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12월 21일에 열린 송년회에서 “2015년에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고 호언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2014년 ‘통일대박론’을 들고 나왔으며, 2015년 7월 10일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통일은 내년에라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1월 1일 국립서울현충원 방명록에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루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2016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작성했다(『한겨레 21』 2016/02/22). 박근혜 정부는 ‘통일’ 담론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키며, 흡수통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통일’은 ‘북한붕괴론’의 다른 버전으로 해석 가능하다.

‘중국의 북한포기론’과 ‘북한붕괴론’ 두 담론은 두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두 담론이 구성된 국가의 정부정책에 대한 영향력이다. 1990년 중반의 ‘북한붕괴론’은 실제 한국과 미국 정부의 공식 외교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많은 한국과 미국의 정부행위자와 대북강경책을 지지하는 학계 및 언론에 의해 담론이 확산되었고, 그 담론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의 대북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1990년 중반에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중국의 북한포기론’은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중앙당교라는 기관이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 대북 강경정책을 지지하는 언론은 그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확산하면서, 과거 그의 중앙당교 내의 직위를 함께 신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공식성명에서는 ‘중국의 북한포기론’에 대한 담론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당위원은 『파이낸셜 타임즈』 기고 후 중앙당교의 부편집장 자리에서 해고되었다.²⁰⁾ 다시 정리하면, ‘북한붕괴론’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국가/비국가 행위자 사이 상호작용을 통해 확산되었고 한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중국의 북한붕괴론’ 담론은 중국 정부행위자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 *ChosunIlbo*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위원은 중국 외교부가 자신의 기로로 인해 “매우 화가 났다(very upset)”고 밝혔다(*ChosunIlbo* April 1, 2013).

둘째, 북한정권 변화를 위한 동력을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찾는다. 1990년대 중반에 확산되었던 북한붕괴론 담론의 대상이 되는 핵심주체는 북한 내부의 엘리트이다. 북한 경제위기를 어떻게 북한 내부의 엘리트들이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다. 북한 내부행위자들의 능력이나 의도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확산된 중국의 북한포기론의 북한 변화의 행위주체는 외부 변수인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자들이다. ‘중국의 북한포기론’ 담론은 중국의 지원이 지속될 경우, 북한 정권이 자체적으로 붕괴하거나 변화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즉 더 이상 북한의 시스템이나 북한 정권 지도자의 비정상성이 북한 붕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체성과 외교정책이 문제의 핵심이다.

셋째, ‘북한붕괴론’이 한국과 미국의 국가/비국가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속적으로 구성 및 확장되었다면, ‘중국의 북한포기론’ 담론은 중국 내부의 비국가행위자와 외부의 국가/비국가 행위자에 의해 재구성되었다.

하지만 두 담론의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정체성과 붕괴의 당위성은 일치한다. 두 담론의 북한에 대한 미래예측은 붕괴되거나 정권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일치한다. 따라서 북한체제 변화를 결정하는 핵심행위자는 차별성을 가지지만, 두 담론 모두 북한 체제의 붕괴나 급변이라는 미래 예측과 대북강경책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표 1> ‘중국의 북한포기론’과 ‘북한붕괴론’

	중국의 북한포기론	북한붕괴론
담론 생산자	중국의 비정부 행위자	한미중의 정부, 비정부 행위자
북한에 대한 전망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것이다. 중국의 지원 없이 북한은 체제 유지가 어려울 것이다.	북한 정권은 정치경제적 위기로 인해 체제 유지가 어려울 것이다.
북한 체제 변화의 핵심 행위자	중국의 대북 외교 정책결정자	북한의 정치엘리트
핵심 이슈	2013년 3차 핵실험과 김정일의 사망 후 중국의 대북 외교 정책의 방향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와 김일성 사망 이후 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

V. 중국 대북 외교담론의 재구성: ‘중국의 북한포기론’의 한국적 재구성

1. 한국 내 ‘중국의 북한포기론’ 담론의 시작

‘중국의 북한포기론’의 2000년대 다른 중국학자들의 담론을 통해 시작되었다. 서진영(2006, 359) 교수는 중국사회과학원 국제전략연구실의 책임인 선지루(Chen Jiru)의 주장을 근거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주장했다. 선지루의 핵심주장은 중국이 북한과 체결한 양국 간의 조약을 개정하여 근본적인 관계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과 북한이 상호 방위를 약속한 상호 우호협력조약 제2조는 현시점의 중국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서진영 2006, 359 재인용).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중국과 북한의 우호동맹조약 중에서 중국의 군사 개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중국이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는 것이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과 북한 간의 상호 우호협력조약을 개정하면 중국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는 북한의 환상을 꺾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조약개정은 중국이 핵 확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세계에 선포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북한이 중국에게 가장 의존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는 경제와 군사이다. 중국의 군사적 지원은 물리적인 지원보다 양자 간의 상호 방위조약이 다른 국가로부터의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이 조약을 개정할 경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에 대한 위협을 강화할 수 있으며, 북한의 정권안정성은 취약해지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다시 정리하면, 선지루 박사는 북한에게 제공해 왔던 조약을 통한 억제력을 포기하여,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이 제공하는 억제력만을 완전히 신뢰했다면 북한이 경제난을 겪으면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필요성은 없었을 것이다.

문정인(2010) 교수는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의 근거로 장렌구이(Zhang

rengui)²¹⁾ 교수의 주장을 소개했다. 장 교수는 북한을 특수한 국가로 규정하고, 북한의 내부 통치력을 강조한다. 북한의 정부체제에는 당, 군, 보위부 경찰체제 등 모든 것이 잘 운용되고 있으며, 한순간에 무너질 조짐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버리고 핵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정치, 경제, 무력 제재를 동시 또는 점진적으로 가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장런구이는 북한이 중국의 압박에도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지만, 북한의 특수성만을 강조하여 지속적인 북한의 생존가능성을 주장하는 비합리성은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지원중단이라는 정책을 도출하게 된다.

두 학자의 주장은 세 가지 논제로 정리된다. 첫째,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그 해결을 위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여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셋째, 그러한 압박은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게 추동하거나, 붕괴하게 될 것이다. 과거 사회주의 혈맹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고려보다는 철저한 중국 국익 중심의 해석이다. 기존 중국의 정책기조는 북한이 붕괴하거나 불안정해지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경제군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다른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정책적 관점에서 ‘중국의 북한포기론’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2013년 당위원회의 기고문 이전에 이들의 주장은 한국에서조차 비주류 중국학자들의 주장으로 취급되었다.

2. ‘중국의 북한포기론’의 한국적 재구성: ‘북한붕괴론’

한국에서 당위원회의 소속기관인 중앙당교의 상징성이 강조되었다. 시진핑이 교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간부의 학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부편집장이라는 직위는 강력한 상징성을 가진다. 중국 최고지도자와 핵심 정치집단인 중국 공산당 간부를 육성하는 기관이기에 중국의 정책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당위원회의 글이 최초로 보도된

21) 장런구이는 김일성대학에서 유학하고,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로 재임했던 북한전문가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미디어가 강조했던 것도 소속 기관과 직함의 상징성이다. 따라서 당위원의 발언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의 근거로 제시한 한국의 미디어들은 중국 공산당을 교육하는 당교의 상징성을 강조하였다. 몇몇 한국의 미디어는 당위원의 직책을 중국 공산당의 고위간부라고 소개하며, 마치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다.

한국의 보수적인 성향의 미디어는 당위원의 직급이 해제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당위원의 주장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2013년 5월 19일에서 22일 당위원은 한국에 초청되어, ‘중국의 북한포기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중국의 대북정책 전환에 대한 가능성, 북한 정권의 불변성을 강조했다. 당위원과의 세미나를 추진한 조직은 한국 내에서 보수 시민단체였고, 그의 대북담론을 유통시킨 것도 한국의 보수 온라인 미디어였다(『데일리NK』 2013/05/21).

당위원과 함께 위에서 설명한 중국의 대북 강경론자들도 지속적으로 인용되었다. 중국 국무원 외교전략 자문역을 맡고 있는 인민대의 스인홍(Shi Yinhong) 교수이다. 스인홍 교수는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중국의 지도자들이 북한에 대해 달리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정상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서울경제』 2013/08/04). 스인홍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으로 인해 매우 귀찮은 이웃을 얻었을 뿐이라고 비판한다.²²⁾ 그는 미국의 대북 강경과였던 부시 정부의 대북 봉쇄정책과 같은 논지를 펴고 있다.

당위원의 ‘중국의 북한포기론’의 담론은 한국에서 ‘북한붕괴론’을 다시 불러내는 도구가 되었다. 그의 파격적인 기고문으로 인해 이름이 알려진 후 한국의 미디어에서는 그의 글을 지속적으로 소개해왔다. 2016년 5월 4일 한국의 국가기관 최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中 정치평론가, 김

22) 그는 북한 붕괴가 중국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삼단계 논법을 제시한다. 첫째, 북한의 붕괴로 한국 중심의 한반도 통일정부가 수립되면 한국은 자연히 미국과 일본보다 중국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한반도에서 미국이 철수하고 미국 영향력이 감소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붕괴가 중국의 장기적 국가 이익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정리하면 비정상 국가인 북한을 포기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중국과 북한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은 정권 10-15년 내 붕괴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덩의 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글의 핵심논조는 1994년에 제기된 ‘북한붕괴론’과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4차 핵실험 이후 ‘유엔결의안 2270’에 의해 북한의 정치, 경제적 고립으로 인한 경제악화, 정치엘리트들의 불만 고조, 미국이나 외부세력에 의한 전복 등의 원인으로 인해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한붕괴론’이 그것을 근거로 생산된 ‘중국의 북한포기론’ 담론에 의해 한국에서 다시 재생산되는 것이다.

중국학자들과의 비공개 세미나에서 제기된 발언에 따르면, 중국의 ‘북한포기론’ 담론의 확산이나 대북 강경 발언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이 있다.²³⁾ 지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진행되었던 한반도 관련 학술회나 세미나에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중국학자들은 한반도 전문가가 아니며, 한국 정부의 강경기조에 맞는 발언을 하는 학자들이 초청되기도 하였다. 덩위원의 전공 역시 한반도나 중국의 국제정치가 아닌 중국의 정치개혁이다.

덩위원의 ‘중국의 북한포기론’은 ‘북한붕괴론’을 가정으로 삼고 있다. 덩은 기고문에서 북한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체제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북한 내에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어차피 붕괴할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중국의 지원 없이는 북한은 생존할 수 없기에 북한의 국가체제가 붕괴되거나 정권이 바뀔 것이라는 결론이다. 다시 정리하면 덩위원의 ‘중국의 북한포기론’ 담론과 ‘북한붕괴론’ 담론은 상호 순환적인 과정을 한국의 정부/비정부행위자를 통해 재구성되고 있다.

VI. 결론

본 연구의 목표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전개된 ‘중국의 북한포기론’

23) 2015년 11월 연변, 북경, 서울에서 진행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비공개 세미나에서 중국의 학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 사용한다. 중국 정부의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한 통제로 인해 중국학자들의 실명을 밝히기는 어렵다.

담론의 중국과 한국 내 담론확산의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과거 시기 중국 외교정책의 담론 분석이 정부행위자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본 연구는 정부의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이 미치는 학자집단과 비정부행위자의 담론을 함께 살펴보았다. 특히 2013년에 제기되었던 ‘중국의 북한포기’ 담론이 어떻게 중국과 한국에서 재구성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중국의 북한포기론’ 담론의 구성은 중국의 대북 정체성의 다양화를 보여준다. 덩위안이 국제사회에 제기한 ‘중국의 북한포기론’은 미국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학자와 중국 내 자유주의 학파들에 의해서 재확산되었다. 중국 외교의 수사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공식성명을 통해서만 중국의 대북 정체성과 정책의 변화가 표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의 미디어에서 대북한 외교정책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중국 비정부행위자의 담론이 중국 외교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지의 여부는 중국 의사결정 과정의 정보접근성 문제로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 하지만 중국 정부 미디어를 아직 통제하고 있으며, 부분적 허용도 중국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의 북한포기론’ 담론의 확산은 중국 사회의 다양해진 대북 정체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북한포기론’은 ‘북한포기론’과 주목할 만한 유사성과 차별성을 지닌다. 두 담론은 담론 구성주체의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북한포기론’은 정부와 비정부행위자를 다 포함하는 담론 구성주체가 존재했으나, ‘중국의 북한포기론’은 중국의 비정부행위자에 의해 구성되고 난 후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의 정부와 비정부행위자들에 의해 재구성되었다. 또한 두 담론에 나타난 북한 체제 변화의 핵심 행위자가 북한 내부의 정치엘리트와 중국의 대북정책결정자로 차별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두 담론의 북한에 대한 정체성과 내구성에 대한 논리적 인식은 유사성을 가진다.

셋째, ‘중국의 북한포기론’ 담론은 한국의 정치적 맥락에 따라 한국적으로 재구성되었다. 한국 정부와 보수학계는 자신들의 대북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중국학자들을 중심으로 초청하였다. 보수적인 성격의 미디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과 일치하는 중국학자들을 초청하거나 그들과의 인

터뷰 형태로 중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의 북한포기론’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북한 정권의 약화나 붕괴에 초점을 맞추어 재해석하였다. 다시 정리하면, 중국의 비국가행위자의 대북 외교정책에 관한 담론은 한국의 정치 외교적 맥락에 따라 재구성되며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 오히려 대북정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냉전 시기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설명하는 ‘담론과 실천’의 이론을 실증연구에 좀 더 유기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론 부분에서 ‘담론’과 ‘담론경쟁’의 개념을 설명하고, 실증주의와 탈실증주의 학자들의 담론개념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론보다는 경험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국 대외정책 연구를 위한 담론 분석틀을 위한 이론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가 담론 형성 및 확산을 통해 대중국 네트워크를 어떻게 강화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내 북한 관련 비정부 행위자(학자, 정치분석가, 기자)와 정부 행위자(정책실무자, 고위관료)들의 담론을 분석하여 중국 내 대북정책의 변화 동향과 그에 맞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문정인 (2010). 『중국의 내일을 묻다』. 삼성경제연구소.
- 박병석 (2009). “중국화평굴기론(中國和平굴起論): 그 전개와 변형에 대한 담론 분석.” 『현대중국연구』. 제10집. 2호, pp. 73-121.
- 이성현 (2014). “장성택 숙청과 북중 관계의 관성.” 『성균차이나 브리프』. 제2집. 1호, pp. 116-121.
- 이희옥 (2012). “중국학자들이 보는 세계질서와 한반도에 대한 솔직한 인식.” 『동아시아 브리프』. 제7집. 3호, pp. 104-105.
- 서진영 (2006). 『21세기 중국 외교정책: ‘부강한 중국’과 한반도』. 폴리테이아.
- 전재성 (2013).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과 중견국 외교론.” 『한국국제정치학회소식』. 제147호, pp. 2-3.
- 조영남 (2009).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나남.
- 주재우 (2010).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담론.” 『글로벌정치연구』. 제3집. 2호, pp. 63-84.
- 차창훈 (2003). “중국 외교정책 연구에 대한 이론적 평가.”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1호, pp. 243-265.
- Campbell, D. (1992). *Writing security: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Minnesota: Minnesota Press.
- Cao, Qing (2007). “Confucian vision of a new world order? Culturalist discourse, foreign policy and the press in contemporary China.”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Vol. 69. No. 5, pp. 431-450.
-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The Korea Crisis.” *Foreign Policy*. Issue 136, May/June, pp. 20-28.
- Chen, Xiaomei (2002). *Occidentalism: a theory of counter-discourse in post-Mao China*. Lanham: Rowman & Littlefield.
- Dai, J. and K. Hyun (2010). “Global risk, domestic framing: Coverag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by US, Chinese, and South Korean news agencies.”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20. No. 3, pp. 299-317.
- Derrida, J. (1978). *Writing and differ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berstadt, N. (1995). *Korea Approaches Reunification*. Armonk, NY: ME Sharpe.
- Fairclough, N. (2001). *The discourse of new labour: Critical discourse analysis*.

- Discourse as data: A guide for analysis*. London: Sage and the Open University.
- Finlayson, Alan (1998). "Ideology, discourse and nationalism."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Vol. 3. No. 1, pp. 99-118.
- Foucault, M. (2012).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London: Vintage.
- Green, M. (1997). "North Korean Regime Crisis: US Perspectives and Response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9. No. 2, 7-25.
- Hansen, L. (2013). *Security as practice: discourse analysis and the Bosnian war*. London: Routledge.
- Ji, You (2001). "China and North Korea: a fragile relationship of strategic convenienc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0. No. 28, pp. 387-398.
- Katzenstein, Peter J. and Rudra Sil (2004). *Rethinking Asian Security: A Case for Analytical Eclecticism. Rethinking Security in East Asia: Identity, Power and Efficien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Kim, J. (2013). "The Transformation of Norm, Policies and State Identity: the Kim Dae-jung Government and the Republic of Korea." PhD thesis, Warwick University.
- Kim, Samuel S. (2001). "The Making of china's Korea Policy in the Era of Reform."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371-408.
- Larsen, H. (2005). *Foreign policy and discourse analysis: France, Britain and Europe*. Vol. 10. London: Routledge.
- March, J. G. and J. P. Olsen (1995). *Democratic governance*. New York: The Free Press.
- Maxwell, D. S. (1996). *Catastrophic Collapse of North Korea: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Military*. Kansa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 FORT LEAVENWORTH KS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 McAdam, D. (1996). "Conceptual origins, current problems, future direction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3-40.
- Milliken, J. (1999). "The study of discours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 critique of research and method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 Vol. 5. No. 2, pp. 225-254.
- Nanto, Dick K., Mark E. Manyin and Kerry Dumbaugh (2010). "China-North Korea Relations." *North Korean Review* Vol. 7. No. 2, pp. 94-101.
- Noesselt, N. (2014). "China's contradictory role(s) in world politics: decrypting China's North Korea strategy." *Third World Quarterly*. Vol. 35. No. 7, pp. 1307-1325.
- Noland, M. (2002). "The Future of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14. No. 2, pp. 73-90.
- Oberdorfer, D. (1997).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 Olsen, E. A. and Jr, S. Jurika (Eds.) (1986). *The Armed Forces in Contemporary Asian Societies*. Boulder, Colo.: Westview Press.
- Renwick, Neil and Qing Cao (1999). "China's political discourse towards the 21st century: Victimhood, identity, and political power." *East Asia* Vol. 17. No. 4, pp. 111-143.
- Schmidt, Vivien A. (2002). *The futures of European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chmidt, Vivien A. and Claudio M. Radaelli (2004). "Policy change and discourse in Europ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West European Politics*. Vol. 27. No. 2, pp. 183-210.
- Scobell, Andrew (2004). *China and North Korea: from comrades-in-arms to allies at arm's length*. Darby, PA: DIANE Publishing.
- Snow, David A. and Robert D. Benford (1988). "Ideology, frame resonance, and participant mobilization."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Vol. 1. No. 1, pp. 197-217.
- Snow, David A. et al. (1986). "Frame alignment processes, micromobilization, and movemen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1. No. 4, pp. 464-481.
- Sokolski, H. D. (2001). *Best of intentions: America's campaign against strategic weapons proliferation*. CT: Greenwood Publishing Group.
- Taylor, B. (2013). "Does China Still Back North Korea?" *Survival*. Vol. 55. No. 5, pp. 85-91.
- Wu, Anne (2005). "What China Whispers to North Korea." *Washington Quarterly*. Vol. 28. No. 2, pp. 35-48.

2. 기타

- Foster-Carter, A. (1994). *North Korea After Kim Il-sung: Controlled Collaps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Niksch, L. A. (2005).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덩위원 ‘북한 김정은 訪中 원하지만 중국 거절.’” 『데일리NK』. 2013년 5월 21일.
- “북한 붕괴, 오래된 농담.” 『한겨레 21』. 2016년 2월 22일.
- “북핵 관련 3차례 中 외교부 발언 ‘기막히게 똑같다.’” 『뉴시스』. 2013년 2월 13일.
- “인민왕 총수 5천만 위안 은닉 발간, 뇌물명단 자백.” 『대기원시보』. 2015년 10월 15일.
- “中 정치평론가, 김정은 정권 10-15년 내 붕괴할 것.” 『연합뉴스』. 2016년 5월 4일.
- “해외 석학에 듣는다: 스인홍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서울경제』. 2013년 8월 4일.
- Shen Dingli. “North Korea's nuclear programme ten years on.” *Caijing*. February 18, 2013.
- ShiYinhong and Peng Guangqian. “If China ends its oil exports to North Korea, the 1.1 million-strong military will be brought to its knees.” *Yihu yixitan Phoenix TV*. February 23, 2013.
- “China's participation in the regime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must have a degree of intensity.” *Huanqiu Shibao Global Times*. February 12, 2013.
- “Chinese Editor Fired Over Call to Abandon N. Korea.” *ChosunIlbo*. April 1, 2013.
- “Fareed Zakaria: North Korea's high-stakes bluster.” *Washington post*. March 13, 2013.
- “In the face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me, China should not be cowardly, delusional, or prickly.” *Huanqiu Shibao Global Times*. February 17, 2013.
- 덩위원 (2013). “China should abandon North Korea.” <https://next.ft.com/content/9e2f68b2-7c5c-11e2-99f0-00144feabdc0>. (2016년 1월 20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6년 05월 20일 |

| 논문심사일 : 2016년 05월 27일 |

| 게재확정일 : 2016년 06월 14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3 No. 2 (2016)

**The Reconstruction of Chinese Diplomatic
Discourses in the ROK: By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China's Abandonment of North Korea
Theory and North Korea Collapse Theory**

Ji-young Kim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focus on the construction of Chinese non-state actors' discourses on North Korea and reconstruction of them in South Korea during Xi Jinping period. In particular, by comparing between China's abandonment theory, which was significantly emerged after the third nuclear experiment of North Korea in 2013 and North Korea collapse theory, which initially appeared in the mid-1990s, it attempts to explore distinctions of both theories and the process of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based on political and diplomatic context. This study argues that China abandonment theory has been initially generated by internal and external actors and exaggerated with the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actors, including influential scholars and major media in South Korea. In addi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diversification of China's identity toward North Korea and the reconstructive process of Chinese foreign policy discourses on North Korea in the post-Cold War period.

▪ Key words: China, North Korea, Discourse, China Abandonment Theory, North Korea Collapse Theory